

김준보 선생의 경제학 분야 업적과 시사점

윤 기 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1. 서 론

1) 생 애

김준보 선생은 1915년 7월 전남 영암에서 출생, 2007년 12월 영안했다. 그동안 수원고등농림 학교와 일본의 구주대학을 거쳐 1941년부터 1946년 9월까지 공무원으로, 1946년 10월부터 서울 대학교 수원농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전남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그 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1980년 8월말 정년퇴임했다. 1952년 한국경제학회 창립에 참여 학회평의원으로 1978년 12월에서 1981년 1월까지 한국경제학회 3대회장을, 1957년에는 한국농업경제학회를 창립하고 1957년부터 1974년까지 학회회장을 그리고 1971년에는 한국통계학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을 2년간 맡아 학회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그동안 이 세 분야의 학술논문을 모아 학회 편저로 농민신문사에서 780쪽의 『김준보 선생의 삶과 학문세계』를 출판했다. 이 세 분야의 저서도 높이 평가된다. 이와 같이 경제학, 농업경제학 그리고 통계학발전에 초석이 되었기에 지난 7월 2일과 3일 양일간 한국농업경제학회 2015년도 하계학술대회의 주제를 “김준보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및 광복 70주년 농업과 농정의 회고와 전망”으로 하였고, 학술발표 1부가 “김준보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었다. 이 심포지엄에서 학회별로 김준보선생의 각 학문분야의 업적과 시사점에 관해서 발표했다. 경제학분야는 윤기중, 농업경제학분야는 전북대학 명예교수 박정근 박사 그리고 통계학은 고려대학교 통계학 교수 최종후박사가 발표했다. 본고는 이 심포지엄에서 “김준보 선생의 경제학 분야 업적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요지이다. 내용은 다양한 저서를 열거만 하고 『한국자본주의사 연구』

와 『한국근대경제사 특강』의 내용 즉 개항이후 한국농촌의 공핍상과 자본주의 발전지표인 지대의 분화과정을 위 저서에서 발취하여 설명한 것이다.

2) 경제학분야

1970년 『한국자본주의사 연구 (Ⅰ)』, 1974년 『한국자본주의사 연구 (Ⅱ)』, 1977년 『한국자본주의사 연구 (Ⅲ)』, 1981년 『현대경제학 서설』, 1986년 『경제학기초논고』, 1987년 『토지문제와 지대이론』, 1991년 『경제학의 기초』, 1993년 『한국근대경제사 특강』등 경제학분야 연구는 다양하지만 한국경제분야로 『한국자본주의사 연구』와 한국경제사 분야인 『한국근대경제사 특강』 그리고 많이 읽힌 것은 『일반경제학』을 들 수 있다. 『한국자본주의사 연구』는 세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권은 3.1운동이 한국경제의 전환점이라는 것, 둘째 권은 한국자본주의 변천을 봉건지대의 분화과정으로 대변하고 셋째 권은 1930년대 들어 독점자본주의하에서의 농업공황을 들고 있다. 그리고 『한국근세경제사 특강』과 『한국자본주의사 연구』는 다 같이 개항이후 한국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촌은 이조후기에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국가 지배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1876년의 개항, 1894년의 동학혁명을 맞게 된다. 숙종(1670-1770)시대의 양전사업 결과가 부정확한 자료 위에서 과세하는 전세(田稅)는 1결에 4-6두(斗)이지만 실제로는 40두까지 납부를 강요받았다. 환곡(還穀)은 전세의 부족을 환곡으로 보충하고 여기에 관리의 부정으로 환곡의 기능을 잃게 된다. 군정은 죽은 사람에게까지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까지 군적에 편입시켜 군포의 납부를 강요하고 또 납부의무자가 도망하면 친족이나 이웃에게 납부를 강요하게 된다. 고부에서는 군수가 만석보를 농민을 동원 축조하고 수세는 군수 개인이 착복했다 한다. 1904년의 한일수호조약, 2010년 한일 합병조약으로 일본의 금융자본이 밀려와 3.1운동을 맞게 된다. 삼정문란의 전초는 영조(1724-1776)의 사도세자의 사사사건으로 국론이 시파와 벽파간에 분열되었고 여기에 삼정의 문란은 1800년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민란, 즉 홍경래의 난(1811), 의로운 임궽정 대도 등 전국적인 민란으로 국가의 지배력은 완전 상실되었을 무렵, 1882년의 임오군란, 1884년의 갑신정변 그리고 갑오개혁으로 흩어진 민심과 결탁된 동학혁명, 한일 수호조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본의 금융자본이 한국농촌에 침입하게 된다. 침입된 자본의 증식이 봉건지대를 분해시키고 또 다른 한편에서 인플레이션과 농업공황을 야기 시키고 있다.

위의 『한국근대경제사 특강』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의 다산강좌(茶山講座) 강의 내용이다. 강의의 내용은 『한국자본주의사 연구』 I, II 및 III을 경제사적으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많은 부분을 보완한 근대 한국 경제사를 기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한국자본주의사

1) 3.1운동 변환점

한국자본주의사를 봉건지대의 분화과정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한국자본주의사 연구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 제 1권 『한국자본주의사 연구 (Ⅰ)』은 1969년이 3.1운동의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50주년을 기념하여 동아일보사에서 『3.1운동 50주년기념 논문집』을 발행했다. 이 논문집에 포함된 김준보의 논문을 가필하여 출판한 것이 『한국자본주의사 연구 (Ⅰ)』이다. 내용은 3.1운동 그 시점이 한국경제의 전환점이라는 것이다. 즉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정책을 시행한 해라 할 수 있다. 한일합병이후 1918년까지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주제가 확립되었다. 또 1920년부터는 산미정책에 한국농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 즉 일본의 자본이 경쟁적으로 한국농촌에 유입되어 한국의 소농자작농과 자작 겸 소작농이 몰락되어 도시근로자로 유출되거나 농촌의 임금노동자 아니면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된다. 한편 농업은 지주제로서 상업적 농업이 전개된다. 증산계획에 따른 미곡은 일본이 수입하고 일본의 공산품시장으로 전락시켜 한국의 전통적인 가내공업 또한 괴멸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농업도 상업화되어 지대 또한 봉건적 지대에서 이윤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상업적 미곡생산을 위해서 1)토지구입을 위한 자본이 유입되었고 2)미곡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3.1운동을 계기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3)상업적 미곡생산으로 지대가 이윤화되는 경향이였다. 이것은 우선 소작료의 살인적 인상으로 소작쟁의가 도처에서 만연된다. 4) 미곡생산의 상업화에 따라 한국의 토지소유자는 소농으로 전락하거나 도시노동자로 전락해 해외로 유출되는 경향이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 공황의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사람들이 한국에서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은 지역별 금융조합을 조직해서 그 자금으로 한국에 진출하기도 했고 “조선척식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에서 토지를 대대적으로 매입해서 토지를 대여한다. 그러면 그 지대는 자본이윤이 분명해진다.

2) 봉건지대(封建地代)

위의 “한국자본주의사 연구”에서 중심적인 부분이 『한국자본주의사 연구 (Ⅱ)』이다. 여기서 지대를 논의할 때 “봉건적 지대(封建的 地代)”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된다. 여기에 간단하게 봉건지대를 들어둔다. 고려시대에는 전시과(田柴科), 그리고 조선왕조시대는 과전법(科田法)이 있었다. 그리고 문무양반의 직계(職階)에 따라 1과는 전(田) 100결 시(柴) 70결 그리고 18과는 전10결 만 차등 지급하고 당대에 한하여 수조권을 인정했지만 모두가 세습하게 된다. 이것은 공전(公田)이라 하여 수확량의 10분의 1은 그 관료에게 조(租)로 납부하고 수납한 조의 15분의 1은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한다. 조상 대대로 경작하는 사전(私田)은 그 10분의 1을 조로 국가에 납부한다. 또 고려조 후기 무신정권이후 토지제도의 문란으로 당시의 권력자는 토지를 겸병하여 권문세족들이 농장(農

莊)을 조성하는데 그 규모는 산천을 경계로 온 주(州)나 군(郡)에 걸친 하나의 행정구역을 이루기도 했다 한다. 노비와 농민도 장원에 결박된다. 이러한 농장이나 공전이나 사전 그리고 농장에서 조는 생산량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 평가는 관료나 양반지주 또는 농장주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그 조가 토지자본에 대한 대가의 개념이 없다. 봉건지대는 봉건적 지주 혹은 영주가 봉건농민으로부터 경제외적 강제를 통하여 징수하는 지대이다. 이에 대립되는 자본제 지대는 농업자본가가 지주로부터 토지를 차용하여 직접 생산노동자를 고용한다. 따라서 자본제적 지대는 농업자본가가 농업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얻은 이윤 즉 잉여노동의 일부이다. 봉건지대는 노동지대, 생산물지대 그리고 화폐지대 세가지가 있다. 노동지대와 생산물지대는 거의 같은 것이다. 노동지대는 농장에서 일정기간 노동을 제공하고 나머지 기간은 자기생활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이고 생산물지대는 일정지역에 농업노동을 하되 일정량을 지대로 납부하는 것이다. 화폐지대는 자본제 지대와 같으나 이것은 봉건지대 말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노동지대와 생산물지대와 같고 다만 노동이나 생산물대신 화폐로 지불하는 점이 다르다.

앞에서 한국 근대사의 기초적 요건을 제국주의적 개항이라고 일단 정리해 보나 그 후의 과정은 시대적 특징의 조건을 찾아서 전체적 경제를 체계적으로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때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나 공황과 같은 위기적 조건보다 뚜렷한 추상적 지표를 찾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역사상 일단 지대(rent)를 지목하게 된다. 물론 합리적 근거를 밝혀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지대라는 가치(價値)의 기초 요인을 지표 삼아 그의 변화 과정을 추적 한국 경제의 근대적 진행 과정을 구획해본다. 그러나 생산 관계를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과는 노동의 잉여가치 전부인 봉건 지대가 근대적 이윤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전통적 지대 또는 소작료 등 토지로부터의 초과 이윤 그것이 어떻게 변질해 나아가는가를 구분해 본다.

3) 지대(地代)

지대는 역사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농업사회에 있어서 봉건사회부터 자본제의 이행이나 자본사회의 초기적 진행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지대는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해서 노동의 잉여(剩餘)이다. 봉건사회는 그러한 잉여가치의 전부를 지대로 규정하는데 대하여 자본제 사회는 곧 지대로부터 이윤이 분리하는 시대를 판별해야 한다. 실로 한반도의 역사적 진행 과정을 체계화함에 있어서 지대보다 더 분명한 객관적 지표는 없다고 생각한다.

봉건지대의 근대적 지대에 대한 특징적 형태는 현물지대에서 근대적 지대는 화폐 형태로 발전하는 점이다. 근대적 지대에도 때때로 노동 형태를 볼 수도 있고 또 고문적 고율(拷問的 高率) 현물 지대도 있었다.

지대의 지표화를 좀 더 구체화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지대는 필요 노동력의 초과적 가치이므로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

- (2) 농업생산의 근대적 특징은 지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지대와 이윤의 분화는 봉건사회와 자본제사회를 구분하는 지표적 조건이 될 수 있다.
- (4) 농업 지대는 이윤을 넘어서 위의 두 사회를 공통적 기반에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 (5) 일본제국주의와 그 후의 한국 경제 역시 지대사적 의미는 뚜렷하다.

『한국자본주의사연구』 I (1970년), II(1974년), III(1977)을 연속 간행했는데 바로 지대를 1차적 지표로 시대 단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제 I권은 3.1 운동의 경제사적 의의를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지대로써 근대사적 획기성을 발견한 것 같다. 그리고 제 II권에서 바로 개항 이후의 한국 경제의 근대사를 지대의 변화 단계로 구분하고 전체를 지대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 III권에서는 다시 「인플레이션과 농업공황」을 들어 지대사적 변천에 대응시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곧 3.1운동이란 실증적 자료를 1차적으로 분석한 결과로써 경제사적 획기성을 구분하되, 결정적 요인이 지대라는 결론을 얻은 연후에 그것을 토대로 제II권(부제 : 봉건지대의 근대화 기구 분석) 및 제III권(부제 : 「인플레이션과 농업공황」)을 각각 부제와 더불어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1운동을 분석함에 있어 그 밖의 각종 근대사적 동태를 관찰하는데 있어서 「인플레이션」과 「농업공황」 등 독점자본주의 진행에 따른 제 요인을 도외시 할 수 없었다. 특히 농업공황은 당면한 현실적 경제문제의 동인이며, 그뿐 아니라 이들은 비단 국내적 범주에 한정되지 않는 세계성을 갖고 있다. 더구나 그들의 포괄성은 자본제 경제만이 아닌 외형상 근대사회를 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본래 「인플레이션」과 「농업공황」을 지대에 연관시켜, 즉 地代史와 관련시켜 진행시킨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사실 거기에 한국경제의 근대적 기본 조건은 거의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라 한다. 다시 말하여 근대적 자본의 형성 조건을 본격적으로 마련한 특성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한 인식 없이 3.1운동의 경제사적 분석은 무의미하다. 지대의 중점적 이윤화와 지대의 근대적 변질이 본격화했다. 바로 여기에 근대적 징표는 비로소 부각된 셈이다. 가장 큰 진전은 기생 지주의 토지자본가화 운동과 소작농을 비롯한 군소 농민의 노동자화 운동이 촉진된 예이다. 이 점, 지배 자본의 압력이 강화한 소산이며 결과는 지대적 부담이 소작농 내지 소농에 대한 강압 과정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었다.

4) 시대구분(時代區分)

『한국자본주의사연구』의 제 II권은 이미 토지사적 구분의 내용이 봉건지대의 근대화 구조라 할 수 있다. 3.1운동의 재인식뿐 아니라 개항이나 동학혁명이나 해방 후의 토지개혁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제적 역사의 체계화를 기도한 소산이다. 복잡한 것 같으나 위의 제 II권을 전개함에 있어 서문(머리말)이 보다 명확하게 표현한 것 같다.

“한국 자본주의는 바야흐로 일세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그 전국면을 통일된 주체적 시각에서 체계화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근대화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어떠한 발자취를 남겨 놓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휘에포펴(毀譽褒貶)은 무엇인가를 전후 일관된 토대에서 정리 분석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업임을 물론이다. …한국 자본주의사를 봉건지대의 근대화 과정에 대응시켜 관찰함으로써 스스로 구분되는 몇 단계의 시대적 특징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전체 경제의 체계적 동태를 통하여 규정한 것이 이 책의 구성이다.”

여기서 “체계적 동태”라는 “위기 국면”은 돌발적 전쟁이나 혁명적 운동이나 또는 「인플레이션」이나 「농업공황」 등 가장 충격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봉건 시대의 변혁이나 변질을 반영하는 요인인 동시에 스스로 자본제 지대의 분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이 반듯이 독점자본에 의한 소농 수탈을 초래하게 하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사실, 소농 공황에 관해서 그 발단이 독점시장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본래 개항에 의한 외부 세력의 침입이 「인플레이션」과 농업공황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시 이들 위기 조건이 동학혁명이나 3.1운동과도 직결된다는 것은 쉽게 재확인되는 요인이다. 『한국자본주의사 연구 (Ⅲ)』은 「인플레이션」과 「농업공황」을 기본적 대상으로 다루었던 이유이다, 다만 한국경제의 전체를 들어서 근대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에 당장 봉건지대의 변질 분화를 떠나서 이를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과 「농업공황」의 획기적 시대성은 고사하고 근대사적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지대의 변질보다 효율적인 지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시대구분을 「朝鮮經濟年報 1939」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제1기 고문 정치, 보호 정치로부터 한일합병까지

제2기 합병부터 1920년까지

제3기 1920년부터 1931년까지

제4기 1931년 이후

이것은 정치적 구분 그대로이며, 경제적 조건은 도외시하고 있다. 즉 일본 식민지 지배력 강화에 시야를 국한하고 결정적 조건을 깊이 묻지 않았다. 따라서 시대 구분 역시 지대사적 동태에 비추어 너무나 단순하다. 특별히 토착경제의 피지배적 특징을 조금도 묻지 않은 제국주의의 통치적 구상에 그쳐 있다.

위의 기별 구성을 좀 더 살펴보면 제1기는 1904년의 한일합병과 국치적 지배시대 초창기를 가리키고, 제2기는 그 후 1920년에 이르는 무단정치의 시대이며, 제3기는 1920년 이후 1931년의 만주침입시기를 가리킨다. 이 중간이 일본의 개발자본이 식민지, 한국 지배의 본격적 수취 과정을 규정한 시기이고 제4기 역시 그저 제국주의의 전시 체제화 내지 전쟁 수행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사적 의미를 부가한다면 제1기는 식민지의 전단계로서 일본 대지주의 적극적 침입에 대응

한 일본인의 식민개척(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과 근대적 화폐 금융 및 재정 기구의 설치, 그밖에 토지수리 시설의 개선, 토지독점의 준비기에 해당되고, 제2기엔 일본에 의하여 국권이 완전히 침탈된 근대적 토지소유제와 조세 재정 제도의 확립과 농사의 독려 등 식민지 기반 형성을 추진하였던 시대이다. 제3기는 바로 1920년의 산미증식 계획과 세계적 대공황에 이르는 식민지 개발 자본의 적극적 투입이다. 그라고 그에 따른 토착경제의 괴압박 과정기이다. 그리고 제4기는 대공황이 이어진 전시 경제의 적극적 추진과 패전에 이르는 과정이다.

1931년의 만주사변도 대공황의 물적 배경없이 간단히 이해될 리 없다. 더욱 그에 대응한 농업 생산과 소비경제를 지배하는 분배 조건, 즉 지대의 변화 관계를 떠나서 문제의 진실을 깊이 인식할 수 없다. 당시 심각성이 절정에 달해 있었던 소작쟁의 역시 지대에 관련된 시대성과 토착경제의 반영이 뚜렷하다. 봉건지대의 이윤화 과정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 이 점이 곧 근대화의 척도를 뜻하는 동시에 정치 지배력의 객관적 보편성을 가리키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동학혁명과 3.1운동의 근대사적 의미를 비교 검토해 보기로 한다. 즉 1894년의 한말 국정의 실체와 1919년의 제국주의적 조건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결과는 이들 양자의 시대적 특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시대적 동태 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밝혀주는 지대를 들 수 밖에 없다. 지대라는 것은 그 동태로 양자의 공통적 속성 위에 대중적 조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3.1운동에서 확인된 지대사적 특성은 제국주의 개발자본에 의한 강압적 국면이 뚜렷하다. 그것은 바로 권세적 힘에 의한 지대의 변질로 식민지 농민 대중의 분해 행태이다. 예컨대 소작관계의 경우 기생지주에 의하여 수납된 소작료 지대는 그 일부가 독점이윤으로 흡수되고, 잔여분이 자기 이윤으로 확보된다. 이때 기생지주의 취득분을 자기지대라 하지 않고, 자기 이윤이라 하는 기생지주 역시 점차 그 실체를 자본가화한 토지 소유자, 즉 토지 자본가로서 변질하는 과정이다.

기생지주가 왜 자본가로 변신하는가? 그것은 두 가지 외부적 압력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중 하나는 앞에서 본 제국주의 일반적 압력, 즉 개발자본의 총체적 지배 운동의 조건이며 기타는 상품시장의 일반적 경쟁에 의한 것이다. 이때에 기생지주는 최소한 사회적 평균이윤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보하고자 몸부림치게 된다. 세력적 지배 자본의 취득분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대(소작료)의 이윤화는 동시에 그 스스로 소작농을 압박하여 노동자화 한다. 이점 당장 기생지주를 자본가화 하는 동인이며, 동시에 식민지의 근대화를 촉진하는 기구이다.

더욱 자작소농(自作小農)이나 자작 겸 소작농의 경우, 이번에는 제국주의의 직접이윤(지대) 수취 운동이 뒤 따르게 된다. 즉 총체적 노동자화 운동인 지대 부담의 증가, 토지의 이윤화 지대의 상실을 자초하는 현상이 퍼지게 마련이다. 실로 이들 운동은 식민지 전경제의 변질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봉건지대의 근대화를 타율적으로 촉진한 것이지만 그 변질은 생산체제의 전면적 체제 개편에서 기대되는 이윤의 지대화 과정이라 할 수는 없다. 아직은 농업자본가의 독립적

형성(기업적 농장은 예외)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기생지주를 자본가로 부르기에 앞서서 “근대적 토지 소유자”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일부의 논자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정확한 개념이라 할 수 없다. 근대적 토지 소유란 선행적으로 자본주의 생산 양식, 즉 지주와 자본가와 노동자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론상 적어도 근대적 토지 소유에 앞서 자본가의 존재를 전제시키고 있는 개념이다. 만약 하나의 생산관계서 자본가 없이 사유적 토지 소유와 노동자만이 대립하여 존재한다면 그것은 당장 근대적 생산 양식이라 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소유토지를 갖는 자본가와 노동자만의 대립적 존재는 예상할 수 있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다. 근대적 토지 소유만을 독립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동시에 근대적 지주 겸 자본가라는 개념 역시 본질적으로 자본가로서 보여 질 뿐이다.

3.1운동을 계기로 일본 개발 자본의 본격 진출과 식민지의 총체적 강압적 과정은 지대의 이윤화 운동을 촉진하였고, 지주의 자본가화와 소작농의 노동자화에 병행하여 적은 토지의 자작농 역시 점차 실질적 노동자화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소생산자 일반의 토지는 제국주의 밑에 결코 수익의 조건이 아니라 질곡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전, 결코 3.1운동 이전 없었던 현상은 아니다. 일찍이 일본인 농장의 기업적 형태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토착 대지주의 경우 역시 자본가적 특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과정이다. 특별히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된 과정이나 그 후에 그러한 변질적 조건은 일단 갖추어졌다고 생각된다. 다만 자본적 압력의 조건은 3.1운동과 더불어 비로소 본격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대체로 공인되는 배경이다.

3.1운동의 위와 같은 동태와 더불어 동학혁명의 지대사적 특징은 무엇인가? 동학혁명의 지대사적 특성도 두 가지 원인에서 규정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일본인 토지겸병(土地兼併)의 획기적인 진전이며, 다른 하나는 지세의 전면적 금납화에 따른 지대 형태의 부분적 화폐화라는 변동이다. 이러한 변화는 다 같이 초기에 나타난 동태이므로 그대로 근대화의 범주라 할 수는 없다. 아직 봉건 체제는 생산의 전반에 걸쳐 견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전정(田政)의 일반적 문란이 조(租)나 세(稅)의 명목이나 수량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조(租)” 아닌 “조(租)”나 “세(稅)” 아닌 “세(稅)”의 부담 다양했다. 당시에 널리 보급되었던 자작농이나 자작 겸 소작농의 토지 또는 국공유지나 왕족 등의 조세나 토지 이용에 관한 일반 농민의 지대 부담을 내용면에서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었던 단계이다.

사실, 동학혁명의 전후 과정이야 말로 아직 봉건적 토지제도 밑에서 생산농민으로부터 생상물인 봉건지대를 직접 수취하는 개인 수조권자(收租權者)(地主)와 그들 상급 수조권자인 왕권의 이중 구조를 볼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조용조(租庸調, 옛 세금, 공납 그리고 부역을 포함한 세제의 하나)의 각종 공납을 겸한 예이며, 세나 조의 명목만은 구분된 바 없지 않았으나 그들 형태 여하에 불구하고 다 같이 봉건지대의 범주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지세의 금납화가 단행되었다 해도 그것은 봉건지대의 부분적 발전 형태에 불과하다. 다만 지세의 금납화로 인한 화폐경제의 기동적 의미는 결코 간단히 간과할 수 없는 획기성이 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동학혁명과 3.1운동의 정치적 의미나 대중적 반발에는 공통성이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시대적 차이는 분명하다. 후자의 경우 우선 지대의 이윤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 따라서 조(租)와 세(稅)의 구분 역시 근대적 성격이 명확한 과정인데 대하여 전자의 경우 아직 봉건지대의 범주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따라서 다 같이 금납지세의 명목이라 하더라도 세원적(稅源的) 단계를 달리하고 있다.

3.1운동에 뒤따른 지대의 이윤화는 봉건지대의 근대적 분화를 뜻하므로 지대의 봉건성은 끝까지 존속한 것 같다. 그것이 전통적 해석이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 견해일 뿐, 이때 지대의 실질이 이윤의 분화인 동시에 근대성을 저버릴 수 없었다. 이 점 바로 “근대적 토지소유”에 따르는 속성이다. 동학 개혁에서는 이러한 변질이 아직 촉구된 바 없었다. 이것이 전후 양자의 가장 뚜렷한 시대구분의 조건이다.

토지소유의 제도적 근대화 조치는 일제하 1910년의 한일합병과 거의 동시에 착수하여 1917~8년의 3.1운동 직전에 완료된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에 의한 것이다. 3.1운동의 근대사적 의의를 내외에 드러낸 전제도 지대의 변질에 기인한 것이다. 동학개혁의 단계에 있어서 아직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국법으로 엄금된 상태였고, 그 후 1901년에 지계아문(地契衙門)이 지계(地契)(토지증명서)를 발급해도 단속대상이 되었다. 「대한제국 인민」 외는 전답의 소유자인 권리가 없으므로 제국 인민으로서 명의를 외국인에 그 “산야를 대여하거나 비밀리에 매매하거나 혹은 전당 양여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하였던 정도이다. 따라서 공공연한 토지소유나 농지경영은 아직 외인에게 불허 상태이므로 근대적 토지 소유제란 당시 보편화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다만 토지 매매라는 자본 활동에 의하여 이 땅에 위협의 조건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미 개항 직후부터이다.

현물지대의 화폐화는 봉건지대의 자연적 발전 과정이며, 근대화의 접근을 고하는 징표라 할 수 있다. 동학난(東學亂) 직후의 일본 세력은 곧 자본의 국내 활동을 크게 조작하는 조건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농업공황」의 형성에 기여한 점 또한 예상되었던 역사이다. 이때에 바로 곡세(穀稅)의 금납화에 따른 곡가의 상승, 국고(國庫)의 손실을 상소한 강홍대(康洪大)의 “미전 겸용론(米錢兼用論)”(1903년)의 세론이 있었지만 아직 물납소작료(物納小作料)가 지배적이었다. 수조(收租) 지주의 곡가 등귀에 의한 일방적 이익이 가속화 된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대일무곡(對日貿穀)의 성행을 보게 된 점, 역시 각별한 발전상이다.

“일청전쟁(1894)에 지조(地租)의 곡납제(穀納制)를 폐지하고 금납으로 하였고 때문에 과거에 국고에 보관되었던 막대한 미곡이 지금은 잉여로 되어서 거의 전부를 수출하게 되어 수출무역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되었다.”

봉건지대의 금납화가 반드시 근대화의 본질이라 할 수는 없다. 형태의 발전이 근대적 합리성이라 할 수만은 없으며, 그 자체가 고율의 지대 부담의 수탈적 조건이 완화되는 것도 아니다. 바로 동학혁명 얼마 후 다음과 같은 왕의 칙령으로 보아 알만 하다.

“부정 과세의 강제 징수와 더불어 많은 공무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각종 구실로 무력한 민중이

주구(誅求)되고 있으므로 금후 지방 관리는 현재 징수하고 있는 비합법적 과세를 감시하여 이를 전폐하라.”

그에 앞서 더욱 봉건적 착취 현상이 만연되고 있을 때 즉 국정의 개혁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 민은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두 계급으로 구분된다. 즉 양반관리 계급은 국가의 허가받은 흡혈귀이고, 국민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상민이라는 하층민은 그들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면 흡혈귀가 흡수하는 혈액을 공급할 뿐이다.

그런데 지대사적 토대를 동학혁명과 3.1운동의 대표적 변동 계기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경제사의 진행을 구획하는 지대의 변질 과정을 좀 더 세분하여 특징화할 수도 있다. 그것은 다른 아닌 한국경제의 타율적 근대화운동에 따른 토착 한국인의 실체적 변질 과정을 일반화한 것이다. 여기에 동학개혁이나 3.1운동 이외에 주어진 지대사적 조건이 다시 몇 단계로 구분되어 특징화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근세사를 보다 정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학혁명이나 3.1운동을 포함한 여러 변혁적 원인 역시 그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시대 단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 개항 이전(1876년 이전)

제2기 개항 이후 동학혁명까지(1876~1894); 봉건지대의 확인

제3기 동학혁명기 이후의 1차 한일협약(1894~1904); 봉건지대의 분화

제4기 제1차 한일협약 후 합병까지(1904~1919)–“토지조사사업”과 3.1운동까지(근대적 토지 소유의 토대 형성); 이윤의 지대화 토대 형성

제6기 3.1운동 후의 변동기(1919~30) (지대의 이윤화); 지대화

제7기 대공황기(1930~37); 지대 공황

제8기 전시체제하(1937~45); 지대의 국권적(國權的) 흡수

제9기 일제로부터의 해방 초기(1945~50); 농지개혁과 지대 변질

제10기 한국전쟁 이후(1950~); 자본제 발전과 지대의 복합 변질

물론 한국경제의 근대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함에 있어서 일단 지대만을 지표로 취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지대사적 단계 규정은 당면한 과제를 농업 문제의 전개에 한정한 것 같기도 하다. 그에 더하여 「인플레이션」이나 「농업공황」의 형성 조건에 관해서도 아직은 전체적 경제의 대상 제약이 불가피한 것 같다. 문제는 마치 당면한 방법론이 노동생산력의 발휘 조건, 즉 생산 양식에 의하여 인류의 경제사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지금 한국 근대경제사의 단면을 볼 때 우리는 기초적 생산 수단인 토지를 떠나서 말할 수 없다. 더욱 생산력을 반영한 지대의 조건은 뒷받침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당면한 시대 구분의 방법 역시 필연적 결과인 동시에 전체적 분석의 선행적 과제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점, 제국주

의하의 식민지 생산 양식의 지대사적 본성을 좀 더 분석해야하는 이유이다.

이 땅에 자본이 축적되기도 전에 쇄국장벽을 헐고 침입해 온 것이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지화 충격이다. 물론 이 땅에 비정(稅政)의 폐단이 있기는 했지만 한편에서 자본 축적의 뿌리는 내리고 있었다. 즉 객주(客主), 여각(旅閣), 육의전(六矣廛) 그리고 보부상(褓負商)등 각종 전기적 상업자본의 대두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6년 일본에 의해서 강요된 강화수교조약(江華修交條約)과 그에 따른 개항전후 토착경제는 일본의 군국주의의 세례를 받게 된다. 즉 식민지화의 초기적 시장화 운동에 접하게 되고 근대화 조건을 외세와 더불어 맞게 되었다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금융자본의 침투를 들 수 있다. 즉 국립제일은행을 한반도에 상륙시킨 것이다. 일본의 화폐로 한국의 물화를 구입할 수 있고 또 한국인은 일본화폐로 일본의 공업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일본화폐에 의한 상품구입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화의 침투로 한전(韓錢)은 인플레이션으로 법화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었다. 그 결과 농업공황을 맞게 된다.

제국주의 식민지 경제 기반을 한반도에서 식민지정책의 구체적 정책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제국주의란 정치력지배력과 영토적 침략행위로 규정하는 경향이다. 군국주의부터 출발 국가 간의 알력, 식민지의 쟁탈로 발전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발전된 독점자본의 국가적 지배력을 말한다. 니코라이 레닌(Nikolai Lenin, 1870-1924)의 『제국주의론』에서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자본주의로 정의하고 다음의 5개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국가적 자본주의라 했다. 즉 그 5가지 조건은

- 1) 경제생활 가운데 결정적 구실을 맡아하는 부문이 독점을 형성할 정도로 고도의 발전단계를 이룬 생산과 자본의 집적
- 2) 은행자본과 산업자본과의 융합과 그들 금융기관을 토대로 한 금융과두제(金融寡頭制)의 설립
- 3) 상품수출과 구분되는 자본수출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대외 경제
- 4) 국제적 자본의 독점체에 의한 세계분할의 개시
- 5) 자본주의 제 강국에 의한 지구상 영토분할이 완료된 시대적 배경

위에서 1-3항은 국내적 지표이고 4와 5항은 세계적 동태이다. 이들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제국주의는 완전히 성립된다고 생각했다. 식민지의 구체적정책의 하나는 동양척식회사(東洋拓植會社)를 들 수 있다. 1908년에 설립한 이 회사는 한국정부가 총출자액의 5분의 1을 출자하여 한일 합작의 형식이었으나 후일 합병으로 출자의 의미는 무산된 셈이다. 더욱이 동양척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인의 토지점령은 급속한 식민지화의 진행임을 알 수 있다. 즉 1908년 현재 일본인이 30정보이상의 토지를 점령한 수는 135명이나 되며 100정보 이상만도 70개소가 넘었다 한다. 1910년부터 1917년까지 토지조사를 통해서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고 대자본이 침투하여 한국인은 소

농 소작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토지조사에 따른 근대적토지제도가 확립되면서 한국인은 토지를 겸병당해 소농 소작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3. 농업공황(農業恐慌)

1) 산미증산계획

3.1운동이후 식민지 개발에 따른 농업공황을 들 수 있다. 3.1운동의 경제사적(經濟史的) 의미는 개발 자본의 제국주의적 확대로 노출되었다. 3.1운동에 이어진 식민지 개발은 제국주의 본국의 공황을 확대 재생산할 수밖에 없었다. 즉 1919년의 3.1운동에 뒤따른 식민 정책은 바로 이 점을 그 대로 입증한 지대사적 동태이다. 일본의 식량 부족에 따른 개발자본의 한반도 투입이 구체화 되었다. 소위 산미증산계획(産米増産計劃)이라는 것이 당면한 1차적 목표이다.

일찍이 일본은 1900년을 고비로 산미의 수출국이던 것이 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전시중의 식량 보충은 대체로 대만과 한국의 미곡에 의존했었다. 이러한 와중에 세계대전에 따른 식량 수요의 급격한 증가, 특히 1918년의 대홍작을 계기로 “쌀소동”이 일어났다. 이 때마침 1919년의 3.1운동을 맞게 되자 일본은 무단정치로부터 부덕이 전환하여 개발자본의 투입을 확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산미 증식을 획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20년에 수립된 위의 산미 증식 계획은 결코 일본의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는 없었다. 자본 투입이 진행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후 공황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을 맞게 된다. 우선 결과는 1920년의 일본내 추곡 가격의 격심한 저락이다. 즉 농업공황이 본격화한 셈이다. 따라서 식민지 개발정책을 위한 자본이 조달 될 수 없었다. 때마침 이 땅에는 당장 금융의 경색을 초래하게 하는 전황(錢慌)까지 일으키게 되었다. 다만 한반도 경제 자체 3.1운동을 고비로 현저한 변화상은 농산물의 상품화가 많아지는 것, 농촌 수공업의 파괴, 공산품 수요의 증가 등 시장경제의 확대경향이다. 따라서 산미증산정책의 주장자들은 애로에 봉착하게 된다.

농산물의 증산은 1920년 이전에 식민지 시책의 주축으로 추진되었었다. 이들 정책가운데 수리사업(水利事業)에 관한 시설(수리조합조례)도 합병이후 중점사업가운데 하나이었으며 1906년(광무 10년)부터 시작하여 1919년 말에는 9개 수리조합, 만1천정(町)의 물리면적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밖에 개간, 간척, 품종개량, 퇴비증산 화학비료 도입 등이 토지 조사 사업에 병행하여 촉진되었다. 그러나 1920년에 세워진 「산미 증식 계획」은 바로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사업으로 일본 본국의 식량난 해소, 일본 자본의 한반도 유입 촉진, 이입된 일본인 토지자본의 효율적 활용 등을 기도한 시책이다. 이 때 토착 생산물인 미곡 증산을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적 토착 농민에 대한 경제적 타산성은 보장된 바 없었다. 다만 산미의 절대량 증가만을 꾀한 불합리성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 당국은 강제력과 지배자본을 동원하여 수출 사업을 중심으로 산미의 증식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때의 생산 농민은 「명령과 감시」의 위압 밑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정상적 수지 타산이란 있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가혹한 수탈적 부담에 거의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일제하 다음과 같은 일본인 식자의 논평은 그 일단을 반영할 뿐이다. “개량된 생산기술을 채용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지도와 독려, 아니 고강도의 명령을 필요로 한다. 조선 농업의 생산적 발전 경로는 이렇게 해서만이 가능했다. 모든 농업 지도의 역사와 농사 경영자의 오늘에 이른 과정 역시 이 끊임없는 감시적 지도와 명령의 독려였다. 그러나 한편 경제적 타산에 어두운 농민에 대하여 자본가적 착취를 위한 절호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찌 식민 지하 강권적 개발 투자란 시책이 토착 농민이나 산미 증산 사업에 한정되리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은 많은 시책 중 숨겨진 피압박 조건이 잊지 못할 정황이다.

2) 증산정책(增産政策)

원래 산미 증식 계획은 이미 본 바와 같이 1차적으로 3.1운동의 다음해인 1920년을 기하여 “조선 개발의 히로인”으로 이 땅에 대두하였다. 향후 40여만 정보(ha)의 토지개량으로 15년간에 9백만 석의 미곡을 증산한다는 것이 당국이 세운 당초의 계획이다. 그것은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일단 관개(灌漑) 개선이란 명목으로 22만 5천 정보의 수리 시설을 준비하는 것이 중추적 사업이었다. 요는 저수지를 건설하고 수리조합을 운영하여 한해를 극복하고 물리면적을 확장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이다.

(1) 산미증산계획(1920년)

토지개량 기본조사(시행면적 소재지, 공사비 조사)

(2) 토지개량(수리)사업

총 시행면적 427,500정보 가운데 관개 개선 225,000정보, 지목변경 112,000정보 그리고 개간 간척 90,000정보

(3) 사업비 총액 236,210,000엔 가운데 국고 보조금 63,010,000엔

정부 앞선 자금 75,000,000엔, 그리고 기업 조달금 98,200,000엔

(4) 산미 증수량 8,995,000석(정곡)

(ㄱ) 토지 개량 결과 348,750석(토지 개량 지역)

(ㄴ) 시비 증가, 경종(경종(耕種) 개량 2,351,250석(동상)

(ㄷ) 3,156,250석(관개 개선 답(畓) 1,842,500석, 비개선 답 1,313,750석)

그러나 처음부터 무리한 목적 사업이 쉽게 수행될 수 없어, 1920년부터 1926년에 이르기까지 목표한 토지 개량 사업은 불과 9만7천 정보에 달했을 뿐이다. 산미 역시 1919년 말에 12,708천

석이었던 것이 1926년에 15,301천 석에 불과했던 점, 위에서 언급한 부진상태가 문제이다. 이상 하게도 이러한 실태의 원인에 대하여 당국이나 일본인 논자의 인식은 대체로 피상적인 것에 그쳐 있었다. 우선 물가의 앙등에 의한 사업비의 증가, 대부이자의 고수준, 보조금의 제약 등 주로 기업 측의 지출면에 중점을 돌리고 있었다. 그도 역시 착오는 아니라 하더라도 진상은 아니다. 진실한 제약은 무엇보다 이미 본바와 같이 곡가의 공황적 저락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그 밖에 지세(地稅)나 수세(水稅)의 부담 증가와 소작료의 고율화에 따른 생산 효과의 저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금비(金肥)사용을 증가시키는 운동에도 많은 기대를 걸 수 없었거니와 그에 앞서 농민의 불안이 토지 경작마저 제약을 면치 못했다. 증산 그 자체가 농민 부담을 가중시켜 생산을 기피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제1차 산미 증식 계획이 일단 무모함을 드디어 깨닫게 된 당국은 그 후 1926년에 이르러 토지 개량 사업의 축소를 중심으로 한 전자의 경신계획을 세웠었다. 이번에는 향후 12년을 가한 다음과 같은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좀 더 토지투자가에 유리한 자금 운용 방식을 취한 것이 주된 수정이다. 그 가운데 자금의 집중화를 꾀한 점이 크게 주목된다. 예컨대 소규모 민간사업을 모아서 동양척식회사나 1차 계획에 비하여 좀 더 올라갔다고 보여지나 이 또한 반드시 목표 달성은 이루지 못했다. 얼마 후 대공황을 맞게 된 이유이다.

어쨌든 위의 갱신된 산미 증식 계획이 자금의 효율적 투하에 주력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 또한 반드시 실효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었다. 다만 전자에 비하여 수출 사업의 진척이 좀 더 촉진을 보았다고 인정될 뿐이다. 사실, 참고로 1926년 당시 88개소였던 수리조합이 1929년에는 불과 3년 동안에 149개소로 증설되었다. 바로 이해(1929년)에 세계적 대공황의 발발을 맞게 된다.

3) 소작쟁의(小作爭議)

제1차 산미계획이 무모하다는 것을 알게 된 당국은 1926년에 토지개량사업의 축소를 중심으로 한 신산미증식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12년을 더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목표로 삼았다. 토지투자가에게 유리한 자금운영방식을 취한 것이 주요 수정내용이다. 그 가운데 집중화를 꾀한 것이 주목된다. 예를 들으면 소규모 민간사업을 모아서 동양척식회사나 신설된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에 대행시키기도 했다. 그 신계획은 다음과 같다.

- (1) 총 미곡증산량 8,167,875석
- (2) 35만정보에 대한 토지개량(灌漑, 지목 변경, 개간 간척), 지역의 증수 목표량 47만 석
- (3) 기타 지역(시비 증가, 경종법(耕種法) 개선 등) 3,447,875석

이때에 실적은 1차계획에 비해 증가했으나 목표달성은 못했다. 그 후 공황을 맞게 된다. 위 2항

의 사업은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에 대행시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 후의 식민지 압제 과정을 증산계획과 더불어 재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산미 증산 계획을 포함한 각종 공황의 조건과 그것이 전체적으로 위기성을 조성하고 있었다.

지금 미곡 대신에 외지에서 수입한 좁쌀을 식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공황을 뜻한 것은 아니나 그것이 토착 공황의 결산적 특성임은 분명하다. 말하자면 개발자본의 강압적 활동과 더불어 자체 생산의 미곡을 수탈적 가격으로 기아수출하고, 조악한 잡곡을 수입하여 노동력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공황의 한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보면 이 땅의 모순은 너무나 뚜렷하다. 더욱 이러한 대중적 기아는 그에 앞서 소농은 호구지책의 토지를 얻을 수 없어 농촌을 이탈, 화전민에의 전락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 소작료의 고율화를 중심으로 한 소작 문제의 심각성 또한 쉽게 예상되는 조건이다. 더욱 소작쟁의의 노동쟁의와의 연결이나 궁핍한 백성과 관련시켜 분석해야 할 국면이다. 즉,

“나날이 피폐해 가는 조선 농가의 경제 상태는 자작농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소작농에 품팔이를 하여 근근히 호구를 이어가는 가난한 농민이 대다수인데 총독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선 안에 가난한 농민의 총수는 162,206호로 . . . 그중 제일 궁농자(窮農者)가 많은 곳은 소작쟁의가 가장 많은 전라남도라는 데 혹은 그 이상 많을런지 모른다.”

실로 극도에 달해 있었던 소작농 일반의 경제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3.1운동 이후 전개된 소작 쟁의로 말하면 봉건제하의 소극적 조세저항이나 굴욕적 호소와 같은 범주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것은 자작된 대중의 자율적 투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투쟁이 어떠한 지도층의 사주나 선동에 의해서가 아니다. 한결같이 농민의 자주적 의식의 발로였다는 점에서 근대적 속성이 여실히 나타난다.

“종래에는 사회사상가의 지도에 의한 쟁의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던 것이나 오늘날은 거의 소작인 자신에 의한 쟁의로 변화하고 있는 경향을 우리는 간과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 이 땅의 본격적 소작쟁의는 분명히 3.1운동 직후 1920년부터 시작한 것이며, 그도 경상도, 전라도의 빈곤층이 많았던 지역으로부터 점차 전국적으로 만연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들 원인별 동태를 찾아보면 스스로 소작권 확보와 소작료의 삭감 요구이었다 해도 실지는 대체로 농업공황에 연결된 각종 원인의 복합적 구성임이 일반적이다.

이 점, 분명히 지대의 이윤화에 대응한 사회 문제의 위기적 반응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도 타율적 개발의 획기적 압력에 대응한 사태의 진전을 뜻할 뿐이다.

4. 결 론

김준보 선생은 1966년에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선임되었으며 1974년에 제23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학술부문”을 수상했다. 수상의 주요공적은 “한국자본주의사연구”의 저서 출판 그리고

농업경제학 분야 연구활동으로 한국농업발전에 기여한 점이다. 1978년에는 23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저작상을 수상했다. 고려대학교 정년한 후에 수원의 한신대학교에 출강했다. 1982년 10월에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시상하는 “다산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1991년 9월부터 1992년 8월까지 두 학기동안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다산강좌”를 담당하여 “한국근대경제사 특강”을 강의했다. 이 강의는 학기 중에 1주에 3시간씩 1년 두 학기 동안 강의하고 대우는 교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급료를 지불하는 특별강의였다. 이 강의 결과는 저서로 출판하는데 그 강의 내용이 『한국근대경제사 특강』이다. 이 강의는 문과대학과 상경대학 학부학생, 대학원 학생 또 많은 교수들도 청강하고 열띤 토론도 있었다. 가장 논의 많았던 문제는 봉건지대에서 근대적 지대(rent)로 분화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근대적 지대는 바로 자본이윤이므로 높아지게 마련이다. 호구지책의 농업에서 잉여노동가치 전부를 이윤으로 회수해야 하므로 지대는 높아져, 즉 소작료는 높아져 자연 소작쟁의는 발생하게 마련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봉건지대에서 근대지대로 분화되는 일의적 지표로 한국자본주의 진화과정을 설명하는 동시에 한말 이후 한국농촌의 분해과정도 설명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한국농촌에 일본자본 유입이 증가되면서 농업생산량 특히 미곡생산량을 증가하고 반면 그 가격은 폭락하여 농촌에 공황을 맞게 되는 현상, 이것은 농촌의 분해로 이어진다.

위 자본주의사 연구와 같은 목적의 저서가 조기준(趙璣濬)저의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이 있다. 연구의 범위와 대상은 같다. 한국자본주의 성립과정을 산업화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임병윤(林炳潤)저의 『植民地에서의 商業的農業의 展開(일본어)』는 산미증식정책의 필연성과 그 기간에 농촌의 분해를 설명하고 있다. 즉 산미증식을 위해서 지주제와 상업적 농업의 지향으로 농촌의 소농과 자작농을 잠식시켜 한국농촌을 몰락시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위 두 저서의 설명이 대상 시기가 같아 참고에 좋을 것 같다.